

.....

2 **국 토 연 구 원**

.....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100%	S
90% 이상 ~ 100% 미만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50% 이상 ~ 60% 미만	E
50% 미만	F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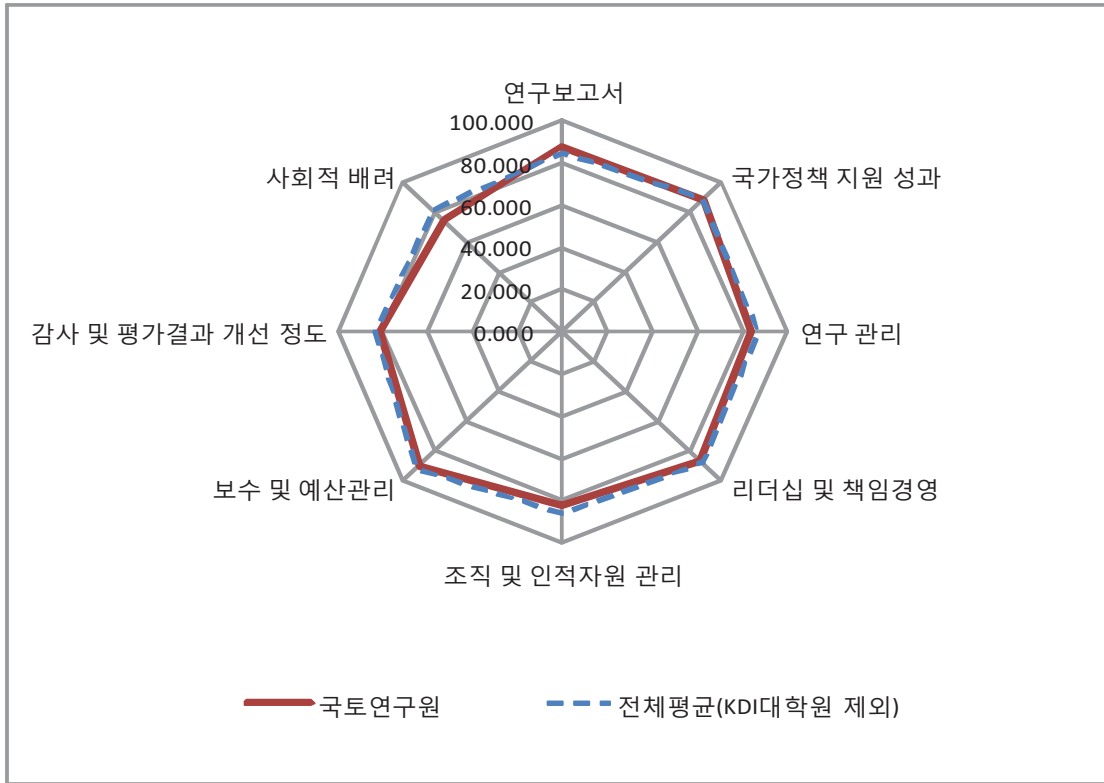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급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input type="checkbox"/>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 등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 여부	A
1-2. 국가정책 지원 성과	1-2-1. 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지원 성과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 실적과 성과	B
		<input type="checkbox"/>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정도	B
		<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B
	1-2-2.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지원 성과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input type="checkbox"/> 선도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B
1-2-3. 정책 집행사업 지원 성과	<input type="checkbox"/>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A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 우수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A
		<input type="checkbox"/> 연구과제 수행·관리의 적정성	A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input type="checkbox"/>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체계 및 실적의 우수성	B
	1-3-3.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A
		<input type="checkbox"/> 정부 3.0 추진 성과 정도	C
1-3-4.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E	
	<input type="checkbox"/>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와 성과	A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급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B
		<input type="checkbox"/> 대내·외적 소통 능력	B
		<input type="checkbox"/> 윤리경영	B
	2-1-2. 책임경영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input type="checkbox"/> 책임경영 이행 정도	B
	2-1-3. 자율지표	<input type="checkbox"/> 기관고유사업 수행과제	A
<input type="checkbox"/>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		B	
2-2.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input type="checkbox"/>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D
		<input type="checkbox"/> 조직 구성원의 역량 및 유연근무 확대	C
		<input type="checkbox"/>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B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B
	2-2-2. 노사관계 선진화	<input type="checkbox"/>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B
		2-2-3.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input type="checkbox"/> 복무·인사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S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전략적 연구사업비 운용	A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A
	2-3-2. 보수체계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S
		<input type="checkbox"/>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정성	E
<input type="checkbox"/> 임금피크제 도입의 적절성	S		
2-4. 감사 및 평가 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등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input type="checkbox"/>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B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E
		<input type="checkbox"/>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S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E
		<input type="checkbox"/> 휴가장려 및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운영의 적정성	S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B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분야]

- 도시 재생, 주택 관련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심층적인 정책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있으며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안 중심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보고서의 경우 여전히 정책 추진의 종합성과 실효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팀이 유기적 업무 수행을 통해, 국정과제의 발굴 선정 수행 그리고 성과확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래국토 발전전략 수립 방안 연구 경우와 같이 수행된 과제들이 정책 수립 및 법 개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토개발과 관련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국의 도시정책 비전에 대한 선도적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를 일반 수시연구과제와 긴급요청 수시연구과제로 이원화하여 발굴/선

- 정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현안연구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다만 외부위원의 참여가 저조하며, 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정책시사점 도출 등 시너지 창출하기 위하여 협동연구를 활용함.
 - 협동연구가 충분히 활성화되었으므로 이제는 협동연구 산출물의 질적 제고에 관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관리 및 확산 실적이 전년도 대비 개선되었으나, 정부3.0 추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추진체계 및 환류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논문게재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전략적인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역량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공동연구, 개도국 정책지원 분야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와 국토개발 분야의 국제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함.
 - 기존 국제협력 사업과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환류와 자체평가체계(외부위원 참여) 구축이 필요함.

[경영분야]

- 기관장은 미래국토를 위한 메가트렌드의 변화 연구, 이에 근거한 장기계획 수립 연구, 통일을 대비한 여러 연구 등 미래를 대비한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노조와도 신뢰관계를 구축하였음. 다양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구성원들과 경영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과 실적이 돋보이며, 투명경영과 청렴성 제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를 구비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도 적절히 실시하였음.
- 미래를 대비한 연구들 사이에 연계성을 높이고, 글로벌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함. 기관발전과 홍보를 위한 기관장의 대외활동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주요 언론매체를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망됨.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도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 ‘미래 국토를 위한 국가전략 및 계획 수립 연구 수행’ 과제에서 미래지향적인 통일대비 국토정책 분야별 연구 등은 시의적절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함.
-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전문분야별 센터 중심으로 특화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성과중심 평가와 보상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함.
- 성과중심 평가·보상시스템의 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안식년 및 국제기구에의 공동연구를 위한 장기과건 등과 같은 구성원의 사기 및 연구역량을 높여려는 노력이 필요함.
- 국가 도시재생 정책지원 기능 강화는 본 연구기관의 고유 기능과 부합하게 진행되었으며, KRIHS 국제협력 역할강화 및 성과확산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업무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관내의 다양한 부서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음. 특히, 조정위원회에서는 직무역량평가에 대한 부서별 조정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운영 노력 및 성과가 기존의 조직운영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드러나지 않으며 교육훈련비 배분과 집행이 기관이 지향하는 구성원의 역량강화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노사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2014년도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관련 지적사항도 모두 이행하였음. 전년도에 비해 노무교육의 횟수와 내용을 보강하였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고충처리시스템을 구축함. 노무교육의 결과를 인트라넷을 통해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위원을 포함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수평적 소통채널을 보다 다양화하고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유아보육비 지급지침 폐지, 경조사비 지급기준과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포상기준 축소, 노사합의서에 규정되었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위반내용 폐지 등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에 대한 기준 준수가 적정하며, 병가기간, 근무시간 중 행사, 기타 복무/인사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가 적정함. 전체적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중점연구과제 선정 및 예산배정과 관련하여 타 사업과 차별화된 보다 체계적인 과정 및 기준 구비가 필요함.
- 연구사업비, 수시연구사업비 및 연구개발적립금 편성 및 집행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수시연구과제 사업비의 집행을 제고가 요구됨.
- 기본연봉 누적식 전환과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비율 준수가 요구되고, 성과연봉 및 능률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인원배분비율 준수가 요망됨.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원 직급별 설명, 노사협의, 공동교섭 등을 통하여 구성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적용대상, 임금 조정기간 및 신규 채용채원 등 제도설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짐.
- 방만경영 정상화 부문에서 예년과 달리 많은 개선 실적이 있으나 성과연봉제 운영 부문에서 여전히 개선 실적이 부족함.
- 구성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휴가 및 휴직제도들이 내부규정화나 사용실적 등의 면에서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로써 이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되지만, 현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채용실적이 정부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의 충족을 위해 장애인이나 유공자 채용 확대를 위한 내실 있는 노력들이 적극 필요한 상태임.
- 부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상당한 수준의 급여격차가 여전히 존재함. 차별해소를 위한 근거 규정, 제도의 보완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격차해소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실행하려는 기관차원의 의지와 노력이 요청됨. 연구직 중심의 운영제도로 인해 비정규 행정직의 격차해소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 우수성

□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 등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장 점〉

-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리적 공간 변화에 대한 현실적 관심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임.
- 다양한 연구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실증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대안 제시의 구체성을 높이려고 노력함.
- 공간정보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 조직, 환경과 세부 역량 유형을 매트릭스로 구성하여 다각적 분석 결과를 종합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 프레임 구성에 영향력을 높이려고 노력함.
- 전반적으로 문헌조사 외 전문가 자문, 세미나 개최, 관련 기관 활동 현장 조사, 사례 관련자 면담조사와 설문조사, 해외 사례 조사 분석,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다층적으로 정책 대안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단 점〉

- 다양하고 적극적인 연구 방법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고서의 경우 연구 목적, 분석 내용, 연구 결과의 논리적 연결성이 다소 미흡함.
- 일부 사례 연구의 경우 전체와 표본(사례)의 특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명하는 내용이 미진하며,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도표의 내용과 주안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여 가독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음.
- 일부 보고서의 경우 기존 제도와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근거한 시사점과 개선 방향 도출 노력이 다소 미흡함.
- 일부 연구에서는 당초 연구계획에 비해 분석 방법과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었거나 누락되어 체계적인 연구 추진과 목적 달성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이를테면 시나리오 구성과 같은 정책적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지역과 도시 공간 정책에 적용할 보다 폭넓은 분석 지표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
- 정책 수요자와 연구 수요자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본문 내용과 도표 활용의 연계성을 높이고 보고서의 최종 검토 과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연구 범위가 방대하여 제한된 예산과 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효한 정보와 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1-2 국가정책 지원 성과

1-2-1. 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지원 성과

□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 실적과 성과

〈장 점〉

- 연구조정팀, 예산기획팀 그리고 인재개발팀 간의 유기적 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정과제의 발굴, 선정, 수행 그리고 성과 확산에 대해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어,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 및 타 연구 수행에 긍정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여겨짐.
- 정책연구협의회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충분히 운영하여 고객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구심의회 개최 시 관련 부처 담당자 참석을 의무화 하여 국정 과제의 전략적 방향 및 기대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비전과 관련된 국정과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음.
- 미래 국토 발전 전략 수립 방안 연구인 경우, 미래 지향적인 국토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하여 트렌드 분석을 하고, 미래 국토 정책 방향 정립과 핵심 추진 과제 등이 도출하여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고, 법 개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함.

〈단 점〉

- 국정과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 과제의 변경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수행과제를 모두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있어, 국정과제 외 연구원의 고유업무 및 정체성을 확립을 위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임.
- 워크숍 개최, 설명회 개최, 세미나 개최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정부부처 국정과제 지원 실적으로 보기에는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모든 연구를 국정 과제와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원의 정체성을 확보하거나 창의적인 연구를 발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국정과제 관련성의 강약을 구분할 필요 있음).
- 수탁과제 수행 시 연구원의 미션, 국정과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 국토발전전략 각 주요 정책 과제의 정책에 반영정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행 정도를 모니터링 하여 그 결과를 미래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의 발굴, 선정, 과제수행, 연구결과평가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연구원 내외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정도

〈장 점〉

- 창조경제 활성화 관련 중추도시 생활권, 활성화 연구를 통해 창조 도시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창조경제 도시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함.
- 기업형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1.13대책 수립에 반영됨.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긴급 및 수시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
- 해외 스마트 시티 건설 컨설팅을 위한 추진방법 및 시사점 제시 등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 건설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 고령화 및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는 연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및 복원력 연구 등은 예측 가능한 미래 상황에 대한 선제적 연구라 할 수 있음.

〈단 점〉

- 대부분의 현안 대응이 국토교통부에 치중되어 있어, 타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의 적극성이 다소 부족함.
- 긴급 및 수시 요청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 상반기에만 이루어지고 있음.
- 제시된 대응 실적과 성과가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기보다 기 선정된 연구과제에 접목한 연구·사업의 결과로 제시된 것이 대부분임.

- 국정과제이자 현안 이슈인 서민주거 복지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함.
- 대부분의 성과가 주제발표 및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법률 제정, 정책 입안 그리고 문제해결 등의 구체적 성과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창의적 연구를 제안 및 발굴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조정팀 등이 현안과제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여 연구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의 다른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보다 더 구축하고,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연구원의 우수 역량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긴급 대응에 대한 활동을 일 년 내내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연구기관의 미션과 관련하여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 그리고 관련학회 등과 연구네트워크를 적절히 구축 및 다양한 운영 실적이 있음.
- 통일 대비, 중장기 국토 비전 및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 등의 협력 활동이 두드러짐.
- 연구분야별로 정책연구협의회 및 정책연구실무회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주관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지자체와 국회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정과제 및 현안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국회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주택시장 및 주택관련 입법에 대해 협의함.
- 한반도 국토발전 포럼, 지역정책 포럼, 미래도시정책포럼 등 다양한 포럼을 직접 주관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단 점〉

- 타 연구기관, 대학 등과도 다양한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순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다소 많음.
- 성과가 대부분 논의, 참석, 그리고 발표 등에 치중되어 있음.
- 다학제 융복합 네트워크 실적이 다소 미약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연구실무협의회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하여 적절한 횟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능동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내부 제도 및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함.
- 다학제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연구/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및 산업계와의 관계 구축 및 공동 연구 등을 위한 노력을 기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참석, 발표, 토론 그리고 논의 등의 성과에 그치지 말고, 정책 제안이나 실행 가능한 안을 도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함.

1-2-2.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지원 성과

□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임.
- 특히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와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복지측면에서 우수한 연구라고 생각되며 사업성 분석까지 실시하여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일조한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공모 운영을 위한 연구’는 정부의 규제프리존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정도로 대안제시의 우수성이 확인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대책은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로 선택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단 점〉

- 본 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과제들의 특성이 주민들과 같은 각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관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바, 과제의 정책추진 시 여론 및 의제 형성을 위하여 토론회나 심포지움, 세미나 등의 개최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실적자료의 제시가 미흡함.
-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효과 중에서 정성적 측면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치의 제시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본 연구기관의 경우 과제의 특성상 각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연관된 경우가 많은바,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론회나 심포지움, 세미나 등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제의 실효성 확보에 더욱 바람직함.

- 파급효과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이 보이는데,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선도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기존 도시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의 시뮬레이션 모형구축을 통한 새로운 국토도시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세계화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연구의 독창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특히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의 경우 과거의 도시개발과정에 대한 반성과 미래 도시를 위해 준비해야 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인구감소, 창조경제시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분야 도전과제에 대해 미래 도시정책 방향을 적절히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의 경우 기존 행정구역 단위의 도시의 외연적 분석에 머물던 기존 도시모형의 한계를 벗어나 도시재생, 고밀개발 등 보다 다양한 공간변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여 다양한 국토도시정책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노력하여 각 정책 수립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수단의 개발과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단 점〉

- 기존 도시모형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도시 모형을 제시하는 등 연구의 선도성이 인정되나 이를 확산, 확립하기 위한 국내·외의 논문게재나 전문서적의 출간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연구결과가 국가정책과정에서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정량적 파급효과 분석들이 대체적으로 다소 미흡하며, 선도과제의 성격상 국토기본법이나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과제들의 선도성은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시된 미래 도시정책 방향에 기반하여 실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각 정책방향별 세부 연구가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 새로운 도시연구 모델을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1-2-3. 정책 집행사업 지원 성과

□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장 점〉

- 제시된 3건의 정책집행사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예산 및 인력의 배분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사업시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계각층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주요 사업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적절한 업무량을 배분하고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고자 한 노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사업측면에서도 연구, 조사, 공론화 등 현 도시재생 정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히 활용된 것으로 생각되며, 주요 업무과정을 프로세스화하여 주제발굴부터 중간 검수, 교정 등의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 성과관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단 점〉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업무가 주로 정보공유, 재생네트워크 확산 등에 사업계획이 집중되어 있는데,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이슈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부동산 시장연구센터의 경우 소명의견상에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당초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에는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임.
- 실적보고서에는 제시된 3개의 사업 중 2개의 사업에서 사업개선에 대한 전년 대비 개선실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별 마일리지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확대하여 적절한 업무량을 배분하고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3가지 사업 중 2개의 사업에 있어서 환류 및 전년 대비 개선실적에 대한 구체적이 기술이 미흡한바 향후에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실적의 제시가 필요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정보제공 점수가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으며 기본연구, 수탁연구 점수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위탁/공동연구 점수는 하락함. 상세업무별로는 위탁/공동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본연구, 정보제공, 수탁연구 순임.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정보제공을 제외한 3개 업무유형에서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 구성모형별 KCSI-EHS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만족도가 전체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보임. 특히 '편의성'에서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가장 높음.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4개 상세업무에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 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분석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고객문의 및 협의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해당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 선도'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 제공·교류'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에 대한 활동 체계적으로 운영', '연구과제를 수행할 적절한 전문 인력과 관련 조직 갖추'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과제의 안내/문의/협의를 대한 담당자 접촉 용이', '고객관계 형성 및 유지 위해 노력'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의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 활동 및 정책개발에 기여', '국가 및 관련 분야에 유익함' 등의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고객관계 형성 및 유지 위해 노력', '고객의 의견 및 건의사항 경청하고자 노력'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업무유형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보제공' 업무유형에서 나타난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기본연구 점수는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으며, 정보제공 점수 또한 상승하였으나 수탁연구, 위탁/공동연구는 하락함. 상세업무별로는 기본연구가 가장 높고, 위탁/공동연구, 육성 및 촉진, 수탁연구, 정보제공 순임.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기본연구, 위탁/공동연구가 전체평균 대비 높으며, 수탁연구, 정보제공, 육성 및 촉진이 전체 평균 대비 낮음.
- 구성모형별 KCSI-EHS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응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높음. 특히 '활용성'에서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남. 상세업무 유형에서는 수탁연구, 정보제공을 제외한 3개 상세업무에서 대부분의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분석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감 보유'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 제공·교류'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유 및 성과 확산 위해 노력', '고객의 입장 이해'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감 보유', '연구과제의 추진 배경 및 목적 제시'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고객의 입장 이해'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감 보유'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반면, '연구과제를 수행할 적절한 전문 인력과 관련 조직 갖추'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의 경우, '업무/연구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고객문의 및 건의사항 전달 위한 담당자 접촉 용이'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육성 및 촉진의 경우, '국가 및 관련 분야에 유익한 포럼, 세미나'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포럼, 세미나 운영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업무유형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과제 수행'에서는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유 및 확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과제 관련 분야의 산·학·연에 능동적으로 연구 결과를 전파할 수 있는 홍보 체계 마련이 필요함. '육성 및 촉진' 업무유형에서는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 재생산된 자료들을 취합하여 고객에게 피드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3 연구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기본/일반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과정에서 국정지표에 적합한 분야의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기본/일반연구과제를 위한 과제발굴 및 선정절차를 연구방향 설정, 연구과제 발굴, 제안서 평가, 연구사업 선정 등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있음.
- 연구제안서 평가를 계량평가와 정성평가의 2단계를 걸쳐 진행함으로써 선정과정의 엄격성을 꾀함.
- 수시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 관련 규정 및 계획이 합리적임.
- 수시연구과제를 일반 수시연구과제와 긴급요청 수시연구과제로 이원화하여 발굴/선정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수시연구과제 선정과정의 체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현안연구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단 점〉

- 연구자문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대부분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룹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나 일반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문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참여가 저조하며, 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발굴을 위한 노력에 비해 내부나 정부부처를 제외한 다른 소스로부터 발굴된 과제의 연구과제 수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참여는 적극적이나 산·학·연을 포괄하는 다른 영역의 외부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제선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정부의 긴급요청 수시연구과제의 경우에도 심의단계를 거침으로써 수시연구과제의 정책연구로서의 체계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 연구과제 수행/관리의 적정성

〈장 점〉

- 연구과제심의, 수행, 평가 등의 단계별로 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있으며, 지식자산시스템, OAK시스템 등 체계적인 연구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8개 과제의 과제명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방지를 위한 변경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수시연구과제에 외부 인력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과제관리의 객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수시연구과제 참여연구자 편중을 방지하는 등 적절한 과제배분을 위해 노력함.
- 과제별로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보고서 평가에 정부부처 공무원을 포함함으로써 연구의 정책부합도를 제고함.

〈단 점〉

- 연구사업관리시스템 외에 연구성과 관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연구과제 수행과정 관리를 위한 체계화된 제도의 수립여부가 불명확함.
- 연구과제 제안서 심의위원들은 모두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 최종 평가 과정에서 수요부처 담당자의 참여 등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리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과제수행단계에서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규정이 아닌 개별 연구자의 운영에 맡기는 체제임.

〈개선 및 건의사항〉

- 과제의 선정 및 심의과정에서 과제수행 중에 과제변경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수시연구과제 수행을 신입연구자의 역량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수시연구과제의 신속한 정책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활용을 강조하는 특성과 맞지 않음.
- 수시연구과제 평가과정에 정책수요부처 담당자의 참여를 통해 정책적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함.
- 과제발굴/선정과정에서 기관 내 연구자들 간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선정 단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착수, 중간, 최종에 이르는 수행과정에서 학계 전문가들 외에도 정부부처 담당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연구결과물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구제안서 평가를 계량평가와 정성평가의 2단계를 걸쳐 진행함으로써 선정과정의 엄격성을 강화한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2016년도부터는 실제 엄격한 운영을 통해 연구과제 변경사례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과제수행과정에 수요부처 공무원과의 수시 협의를 의무화 하는 등 수시연구의 정책 부합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체계 및 실적의 우수성

〈장 점〉

- 협동연구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운영하여 품질관리를 하고 있음.
- 다양한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함.
- 대형프로젝트를 전사적 연구수행과 함께 산·관·연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전체 연구과제 중에서 협동연구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협동연구가 잘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됨.
-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연구는 사회과학과 공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됨.

〈단 점〉

- 협동연구 수행비율이 72.2%로 협동연구를 중요하게 활용하는데 2015년 대표사업과 협동연구 사이에는 일치성이 다소 낮음.
 - * 대표사업: 국토종합계획, 통일대비, 빅데이터, 공간정보시스템(클라우드)
 - * 대표실적: 부동산시장, 도로안전 향상, 도시거주성 향상, 국토지표 프레임워크, 북방 지역 발전
-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음.
- 협동연구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음. 특히,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와 같은 초대형과제의 경우 상호협력 없이는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움.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의 대부분(92.2%)이 주관 협동연구로 협력 협동연구 비율(7.8%)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연구와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 연구의 경우 원외 연구진의 규모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연구진의 규모와 역할 등이 분명히 기술되어야 함.
- 연구기관 외 기관과의 상호협력에 대한 진행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전문가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협동연구 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

- 나, 실효성 있는 성과가 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연구과제 중에서 협동연구과제의 적정 비율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협동연구과제 선정 시 협동연구 수행의 필요성, 공동연구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심의가 요구됨.

1-3-3.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지적재산권관리지침, 연구정보관리지침 등 지식자산 관리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상황변화를 규정에 반영하는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충실하게 NKIS에 등록하고 있음.
- 국토연구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확산 수단을 운영하고 있음.
- 연구보고서 배포 기관 등이 적절하고 이슈페이퍼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지식자산 관리시스템의 연구성과자료 및 연구활동자료가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음.
- 연초에 전년도 홍보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확산·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전자도서관 방문자가 전년 대비 84% 증가함.
-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전문도서관분야 OAK 보급대상기관에 선정되어, 세계 약 2,800개 기관의 OAK 리포지터리들과 연계하여 성과물의 해외확산에 노력함.

〈단 점〉

- 해킹 등 지적 자산 침해 대응 절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지식 정보 관리 시스템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 도입 운영 계획이 부족함.
- 성과 확산에 대해 전략적 접근의 형태가 보이나 환류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음.
- 일반인 국토지식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국민 성과확산 노력을 하였으나, 내용이 고등학생이하 학생 위주로 편중되어 있음.
- 언론사와의 기획보도가 다소 미흡함.
- Space & Environment와 GDPC 뉴스레터를 해외에 발송하고 있지만 기관의 활동상을 종합한 영문 뉴스레터를 해외 정책고객에게 보내는 것은 미흡함.
- 영문 홈페이지의 IRTPP는 1건만 게시되어 있고, PKPP는 한글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등 관리가 충실하지 못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지식정보관리시스템 도입과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성과 확산에 대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성과확산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 (목표, 전략, 추진체제 등)를 수립하면서 환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국내·외 의심되는 해킹시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킹대비 모의 훈련 등을 통한 대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방송 및 신문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획시리즈나 기획기사의 확대를 좀 더 강구하기 바람.
- 기관장과 연구원들의 언론 기고가 영향력이 좀 더 높은 매체에 실리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기관의 활동상, 연구결과, 한국 국토정책에 대한 홍보 등을 포함한 영문 뉴스레터를 PDF파일로 제작하여 해외정책고객에게 연 4회 발송함으로써 싱크탱크로서의 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함.
- 해외 언론보도가 G20 국가와 개도국에 균형있게 보도되고,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 필요함.
- 영문 홈페이지 내용의 충실성을 높여나가도록 함.

□ 정부3.0 추진 성과 정도

〈장 점〉

- 정보공개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보공개 내용을 명확하게 체계화하여 공개하고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함.
- 사전정보공표 항목이 전년 대비 47항목이 증가하여 개방성이 높아짐.

〈단 점〉

- 맞춤형서비스의 당초 목적에 비해 수요자 분류별 니즈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이 아니고 소극적인 보급형 서비스에 그침.
- 기관장 주재로 정부3.0의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검토가 없었으며, 기관장 주재 정부3.0회의가 전임기관장 시에 1회에 불과함.
- 전 직원 대상 정부3.0 교육에 참석자가 적음.
- 맞춤형 서비스는 수요자 입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심층적 고찰과 분석이 좀 더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3.0 추진을 위해 성과관리 조직을 상설화하고 목표 및 추진체제 환류 등 체계적

운영이 필요함.

- 맞춤형서비스 발굴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수준 높은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 체제 마련 필요함.
- 연초에 기관장 주재로 정부3.0의 전년도 실적을 평가한 후 당해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한 후, 책임관이 점검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함.
- 직원 대상 교육 시에는 전 직원이 참석토록 유도함.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해당사항 없음.

〈단 점〉

- 1인당 논문 게재실적이 전년도 0.73편에서 0.31편으로 하락함.
- 논문게재 실적이 평가의 주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노력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타 기관과 타 부문과 공동연구 장려가 필요함.
- 기관이 발간하는 '국토연구'에 연구원들의 논문게재 활성화가 필요함.
- 기관의 규모를 감안할 때 영문학술지 발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4.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

□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와 성과

〈장 점〉

- 국제화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어 있고 단계별 실천과제가 기반구축, 확산, 강화 3단계로 잘 정리되어 있음.
-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전략적인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역량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공동연구, 개도국 정책지원 분야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와 국토개발 분야의 국제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함.
- 기 체결된 MOU기관을 정비하고 내실화하여 국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타 연구기관과 차별화된 연구역량 국제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국제공동(협력)연구의 성과 7건과 해외 수탁연구 3건 등 중장기 국제협력 연구과제 진행성과가 양호하며, 특히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사업 성과가 탁월함.
- 개도국 중심의 국제화와 선진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미션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 2014년 대비 연구역량 국제화 지표별 성과가 대체로 향상되었으며,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환류실적의 경우 대표사례 2건도 우수함.

〈단 점〉

- 해외전문가(Non-Residential Visiting Fellow) 활용실적이 매우 양호하나, 연구인력 교류에 있어서 월단위의 해외파견형(out-bound) 인력교류 실적이 다소 부족함.
- 전년 대비 연구역량 국제화 성과가 탁월하나, 국제화 제고를 위한 전략 단계별 정량적, 정성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의 이행실적은 있으나(대표사례 2건),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의 모형, 단계 등 구체적 프로세스와 제도화 노력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제화 제고를 위한 비전과 단계별 전략 수립 시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전년 대비 성과비교가 가능하도록 성과지표에 기초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보고서를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인력 교류에 있어서 공동연구 수행이나 안식년제와 연계하여 최소 월단위의 해외파견형(out-bound) 인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국제협력 사업과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피드백과 자체평가체계(외부위원 참여) 구축이 필요함.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연구환경을 국토정책변화, 고객환경변화, 대내외 연구환경변화의 세 차원으로 분류한 시도는 적절함.
- 미래국토를 위한 메가트렌드 변화 연구, 이에 근거한 장기계획 수립연구 등이 돋보임.
- 통일 대비 북한지역 관련 연구, 통일과 연계된 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등 시의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음.
- 정책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의 협의를 활발히 하였으며, 주요 보직자가 참석하도록 독려하여 정책협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스터디그룹을 지원함으로써 역량강화를 긍정적으로 자극함. 연수갈 수 있는 인력의 양이 타 기관에 비해 많이 설정되어 있으며 정착금 등의 지원도 함.
- 노조와의 소통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으로 신뢰를 구축한 점이 우수함.
-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동연구가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토연구원의 경우 기관장의 추진력으로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한 점이 우수함.

〈단 점〉

- 선정된 3대 현안문제가 연구원의 대내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향후 국토개발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현안의 발굴이 미흡함. 따라서 실적과 성과가 노사관계 안정화 등 내적인 문제에 치중됨. 이러한 노력은 국책기관으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당연업무라고 판단됨.
- 미래형 국토개발연구와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개발 연구와의 연계성과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결여됨.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국제공동연구 수행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세미

나 참석 등 행사성 성과의 비중이 높음.

- 기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기관의 구체적 역량강화에 기여한 바가 분명치 않음.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및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한 상황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다소 미흡함.
-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4개 기관과의 MOU 체결을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내실화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및 건의사항〉

- OECD 국가들과의 교류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래형 국토개발계획수립을 위해 지정학적 위치와 인구지리학적 특성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국책연구기관임을 감안하여, 현안문제를 선정할 때 외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관련 사항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기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제도나 활동들을 전략적으로 종합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인하여 이미 상당수의 기관들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비한 인력운용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함.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일별 및 수시-주별-월별 등 다양한 소통체계를 구축함.
- 경영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구성원들 사이의 노력과 실적이 돋보임.

〈단 점〉

- 생일자와의 식사를 제외한 전 직원과 소통하는 통로의 운영이 불확실하여 ('수시'로 표현, 실적제시 없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기관발전과 홍보를 위한 원장의 대외활동에 있어서 경제지와 같이 특수한 매체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기고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기관과 기관장의 대외 홍보채널을 좀 더 다양화하고 공중파 방송 등 영향력있는 매체에 의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전국규모 주요 일간지를 통한 기고가 상당히 파급력이 크므로 기고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전 직원과 소통하기 위하여 직급별 간담회를 활발히 하고, 직종이나 직군 간 간담회를 통하여 수평적 의사소통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윤리경영

〈장 점〉

- 투명경영과 구성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도 적절한 수준임.
- 연구과제 배분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경력평정이 아닌 과거 3년간 평정에 근거한 승진체계로 인사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부서별로는 폴더를 만들어 구성원 간 공유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임.

〈단 점〉

- 비정규직의 급여수준이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함.
- 규정의 추가 및 보완, 개선 등 연구윤리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미흡함.
-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조치의 수준이 미흡함.
- 자체심의회에서 연구윤리위반 의심사례가 나타난 바,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 일상감사(사전통제) 대상기준의 하향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현재 500만원 이상).
- 좀 더 빈번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연구윤리 위반의 사전방지 및 연구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 표절검색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에 대한 통계를 축적하여, 평소 구성원들의 연구윤리 인식의 정도를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2-1-2. 책임경영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된 경영목표들과 실천계획들이 잘 연계되어 있음

며,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음.

- 전체적으로 실천과제가 성과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고, 제시된 실천과제의 성과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미래 국토를 위한 국가전략 및 계획 수립 연구 수행’과제에서 미래지향적인 통일대비 국토정책 분야별 연구 등은 시의적절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함.

〈단 점〉

- ‘국제공동연구 체계화 및 연구역량 강화’과제를 통하여 글로벌 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공동연구 및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대가 진행되었으나 다소 미흡함.
-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전문분야별 센터 중심으로 특화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성과중심 평가와 보상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함.
- 원장 이취임으로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이 대폭 변경되면서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연계성에 미흡함.
- 성과목표가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 정성적 지표로 설정되어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려움.
- 미래지향적 국토정책연구 선도라는 추진전략 차원에서 미래 국토를 위한 국가전략 및 계획 수립 연구라는 실천과제로 수행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 및 확산전략 연구사업의 실제 추진 연구실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다소 거리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본 기관의 글로벌 연구교류협력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실천계획에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 성과의 확산 및 홍보 강화에서 영문저널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홍보를 구체적으로 실천계획 내에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과제가 미래지향적 연구 이외에 융복합적이고 중장기 연구내용을 포함하는 과제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 성과중심 평가·보상시스템의 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안식년 및 국제기구에의 공동연구를 위한 장기파견 등과 같은 구성원의 사기 및 연구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통일준비 국토연구와 관련하여 외국자본(특히 중국)의 북한 내 토지 및 항만, 광산 등 개발권 및 사용권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토 관리 및 개발 차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책임경영 이행 정도

〈장 점〉

- 정관개정, 연구역량 국제화, 경영안정화 등에서 일정한 실적을 보임.
- 경영목표 승인 및 정관개정, 연구역량 국제화 및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시 연구회와의 협력관계가 원활함.

〈단 점〉

- 연구원 주관의 연구회와의 협동연구사업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협동연구와 관련하여 연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연구회와의 협동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1-3. 자율지표

□ 기관고유사업 수행과제

〈장 점〉

- ‘국가 도시재생 정책지원 기능 강화’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이라는 본 연구기관의 중요한 기능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평가요소로의 설정은 적절함. 특히, ‘국가 도시재생 정책지원 기능 강화’는 국토연구원이 2014년 7월 도시재생실증연구단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선도 지역 대상 정부 도시재생추진관련 핵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됨.
- 도시재생 현안과제 발굴 및 계획 수립, 이행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투입정도, 환류체계 등 과제수행의 적정성이 인정됨.
- 도시재생 관련 연구, 도시재생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정도, 관련 자료 구축 및 정보공유 확산 정도 등 실적의 우수성이 인정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성적 목표 이외에 정량적 목표를 동시에 설정함으로써, 성과평가를 보다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함.

- 국토연구원의 역할 및 국가 도시재생 사업은 2015년 현재 2차년도 사업(1차년도: 기획연구, 2차년도: R&D)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바 이후의 진행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

〈장 점〉

- 국토연구원의 글로벌 역할 강화와 최근 글로벌협력시대와 전세계 인류의 공존번영을 추구하는 추세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KRIHS 국제협력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을 평가요소로서 선정한 것은 적절함.
- 국제협력 기반 강화,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성과확산 이행을 위한 인력 및 조직투입, 환류체계 등 수행과정의 적정성이 인정됨.
- 개도국에 대한 국토개발경험의 확산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단 점〉

- 많은 부분이 교육연수에 집중되고 있고, 현지 컨설팅 부분은 약한 것으로 판단됨.
- 과제의 선정, 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함. 특히, 2014년의 과제 주제와 차별성이 부족하여, 2015년의 추가적인 고유한 성과가 다소 불분명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작년과 유사하게 국제협력 역량강화 부문이 제시되었고, 일부 심도 있는 시도가 있었으나, 2015년에 현저하게 개선된 증빙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토연구원의 국제협력 비교우위를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영문으로 모듈화해서 해외에 성과를 확산시키고, 개도국의 국제협력 수요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에 대한 교육, 세미나, 공동연구에서 진일보하여 구체적인 정책 자문 및 컨설팅 등 문제해결 단계로 교류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권고함.
- 국토개발 경험의 개도국 전수는 지속적 노력이 전개되고는 있으나, 아직 기초적인 단계로서 지속적인 방법의 구체화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기능별 본부체제 조직구성에서 브랜드(연구분야)별 조직구성으로 전환('15. 9)하여 연구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 대응력을 제고함
- 정책연구 강화, 경영 선진화 및 조직역량 증진의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운영 성과가 높음.
- 2015년 신규인력 충원을 계획 이상으로 달성함(15명 계획 16명 충원).
- 내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포상제도에 근거한 성과 우수직원 선발 및 포상으로 내부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함.

〈단 점〉

- 조직운영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가 아직 신규 조직에 맞도록 전환되지 않아 정확한 성과평가 기반 구축이 미흡함.
- 고객요구조사를 위한 연구원 내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이 내부고객에 대하여는 있으나 외부고객에 대한 부분이 없어 이를 위한 체계적 요구사항 수립의 근거 확보가 미약함.
- 고객요구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등 운영실적이 주로 유관부처 등의 요구사항 수립 및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부류의 고객 채널을 통한 요구사항 수립 기능이 미약함.
- 인력채용 관련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외부 심사인력 참여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참여 구성에 대한 조항(총 7명 구성에 1명이상 참여)이 모호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실효성이 다소 낮음.
- 채용상 부정방지를 위한 규정이 심사위원 보안서약 외 포괄적인 사항(예: 전형위원 선정의 제척, 회피, 기피 기준 제정 등)이 나타나지 않음.
- 지역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인재 채용 실적(2015년 총 채용인력 71명 중 지역인재 16명)이 저조하며, 지역인재 채용 우대를 위한 규정 제정 등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조직운영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를 새로 개편된 조직에 맞도록 전환할 것을 제안함.
- 내·외부 고객요구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고객요구를

원활이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함.

- 다양한 부류의 고객 요구사항 수립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및 향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검토하기 바람.
- 인력채용 관련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외부 심사인력 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권고함.
- 채용상 부정방지를 위한 규정이 만들어 활용되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지역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 우대 규정 제정 등 제도화 기반을 갖추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조직 구성원의 역량 및 유연근무 확대

〈장 점〉

- 2015년 11월 교육훈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관 비전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수립하였음.
- 행정직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공로연수제도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였음.
- 7개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교육·연수보고서를 인트라넷에 공지하여 전직원이 공유하고 있음.

〈단 점〉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이 연도말(2015년 11월 24일)에야 수립되었음.
- 2015년의 조직 구성원 역량강화 노력은 전략적 차원의 노력과 성과 없이 기본적으로 제도화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수준에 그침.
- 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인재상과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핵심역량 측정과 평가를 통한 전략적인 교육·연수가 이루어지지 못함.
- 교육·연수프로그램과 인재상 관련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에 대한 제시와 성과측정 노력이 미흡함.
- 교육 및 연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함에 있어 직접성과 합리성이 미흡함.
- 구성원의 수요와 만족도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개선, 삭제 실적이 미흡함.
- 연구직과 비연구직간 교육훈련비 배분과 집행의 전략적 관점이 미흡함.
- 2015년에도 2014년에 도입한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유형만 시행되었으며,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 실적이 매우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비전, 인재상에 부합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구성원별 핵심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한 후 성과를 평가하여 환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 필요함.
- 교육훈련비 배분과 집행이 기관이 지향하는 구성원의 역량강화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환류할 것을 건의함.
-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인재상과 관련된 핵심역량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육 및 연수 실적과 평가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
- 기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기관 차원의 중요성, 구성원의 만족도를 반영하여 구조를 개편하고, 구성원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함.
- 교육훈련비 총액과 1인당 교육훈련비 금액을 단순 제시하는데 그치지 말고, 연도별 금액변동의 원인을 교육훈련의 효율성과 효과성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할 것을 건의함.
- 복무규정에 유연근무제 근무불량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건의함.
- 향후 유연근무제 유형이 확대될 경우 다양한 자율근태관리 수단을 도입할 것을 건의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연구직과 비연구직에 대한 평가요소가 그 특성에 맞도록 배정되었으며, 특히 연구직의 연구업적평가는 계량화 되어 있음.
- 비연구직의 경우, 기계적인 계량적 평가보다는 어느 정도 정성적인 평가를 활용한 정량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업무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관내의 다양한 부서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음. TF 활동, 본부장회의, 인재개발팀, 연구조정팀 등 여러 부서들이 각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학술지 게재에 대한 평가점수 반영을 통해 학술지 활동을 격려하고 있음.
- 평가시스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2회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특히, 조정위원회에서는 직무역량평가에 대한 부서별 조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음.
- 보고서 평가의 공정성 부분은 외부전문가 풀을 활용하고 있음.
- 이의신청제도를 전산화 하여 신청접수를 온라인으로 받고 있고, 그 결과는 개인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 개인신상 비밀을 보장하고 있음.

- 평가결과의 금전적 보상으로 성과연봉과 능률성과급 지급으로 연계활용하고 있으며, 비금전적 보상으로 승진, 재임용, 포상, 교육연수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승진과 관련하여 5등급으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연구원이 책임연구원 승진 시 4년간의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책임연구원 그룹은 4년 이상의 석사급 연구원과 박사소지자들로 구성되어 이들 간의 연구활동을 격려하고 있음.
- 석사학위 연구원이 4년 경력이전에 박사학위 취득할 경우 연봉산정과 승진가점으로 활용하고 있음.

〈단 점〉

- 보고서 평가 시 외부전문가 추천관련 규정에서, 원외만 따로 규정된 부분이 없음.
- 평가는 7등급으로 하고 있으나, 성과급 지급 시에는 5등급으로 하여 평가결과와 다소 불일치하고 있음.
- 평가결과의 활용차원에서 비금전적 보상 중 포상제도는 연구직에만 적용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석사급 연구원과 박사급 책임연구원의 직무와 연구 특성을 반영한 평가요소 및 평가 비중을 배정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할 것을 건의함.
- 학술지 게재료 지불에 대한 “내규”지침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함.
- 보고서 평가에 대한 외부전문가 추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원내 몇 명, 원외 몇 명 등과 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시행상 규정의 경직성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함께 신설하여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함).
- 업적평가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구성원 재교육을 실시 할 것을 건의함.
- 평가결과의 등급과 성과급 지급 시 사용하는 등급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건의함.
- 평가결과의 활용차원에서 비금전적 보상 중, 포상제도를 비연구직에도 적용할 것을 건의함.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노사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단협 갱신체결 및 이면 노사합의서 폐지), 2014년도 방만경영 정상화이행 관련 지적사항도

모두 이행함.

- 전년도에 비해 노무교육의 횟수와 내용이 보장되었고, 익명 고충 신청이 가능한 '직원소리함'을 설치하여 고충을 처리하였음.
- 전직원 체육대회, 원장-생일직원 간담회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요보호아동, 노인병원 급식 지원을 통해 구성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제고함.

〈단 점〉

- 복수노조체제 하에서 여전히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협의회 구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노무교육의 결과를 인트라넷을 통해 공유할 필요가 있고, 여성위원을 포함하는 고충처리위원회(3인)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함.
- 수평적 소통채널(기관장-직원, 부서별 간담회 등)을 보다 다양화하고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2-2-3.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성

□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장 점〉

-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경조사비 지급 기준과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포상기준 축소 등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에 대한 기준 준수가 적정함.
- 노사합의서에 규정되었던 방만경영정상화 이행계획 위반 내용을 전면 폐지함(종양의심 진단검사비, 가족건강검진비, 유아보육비 지원제도 등).
- 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 제6조 제2항을 개정함(2015. 6. 26).
- 퇴직금지급규정 중 가산지급에 관한 제5조를 폐지함(2015. 6. 26).
- 유아보육비 지급지침을 폐지함(2015. 6. 12).
- 선택적 복지에 관한 기준 제5조를 개정함(2015. 6. 12) .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건의함.
- 모니터링 결과를 상시 점검하고, 감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건의함.

□ 복무/인사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장 점〉

- 병가기간, 근무시간 중 행사 등, 과거 문제가 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음.
- 기타 복무/인사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가 적정함.
- 노사합의서에 규정되었던 재임용 시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 정년퇴직자 여행경비 지급기준을 폐지함(2015. 6. 12).
- 동호회 지원금 지급기준을 개정함(2015. 6. 12).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복무/인사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에 고유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건 의함.
- 모니터링 결과를 상시 점검하고 감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건의함.

2-3 보수 및 예산 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전략적 연구사업비 운용

〈장 점〉

- 중점연구과제는 연구기관 설립목적 및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높은 주제를 분야별 전략과제로 기획하고 이들 중 선정하고 있음.
- 특히 “기관장 경영목표”에 따라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연구선도,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연구 확대, 과학적 국토정책 연구수행 기반 강화 등의 추진전략 하에 연도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중점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있음.
- 중점연구테마 관련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중점과제는 매년 발굴·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2015년 중점연구과제의 예산집행률은 91.9%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2016년도 중점연구과제 4개에 대하여 모두 연차별 과제로 선정하였음.
- 각 과제에 대한 예산배정은 기본 및 일반과제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연차과제는 연차별 수행계획에 따라 차등배정하는 등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음.

〈단 점〉

- 중점연구과제의 선정 및 예산배정과 관련하여 타 사업과 차별화된 과정 및 기준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중점연구과제가 갖고 있는 특성상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규모에 적합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추진전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점연구과제 선정과정을 기초 및 일반과제의 선정과정과 차별화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선정될 수 있는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함.
- 중점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배정 기준을 수립하고 기본 및 일반과제의 예산배정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장 점〉

-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사업비 기준 및 기초연구비 편성기준을 준수하였음.
- 전체사업비 중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80.8%(2014년), 59.4%(2015년) 등으로 연구회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기초연구과제 비율은 25.9%(2015년), 18.1%(2016년)이며, 수시과제비율은 11.2%로 모두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연구사업비를 편성하였음.
- 2015년 연구사업비 예산집행률은 전체적으로 92.2%이며, 각 사업유형별로는 기본연구과제 90.8%, 일반연구과제 94.7%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수시연구사업비는 이사회의 승인내역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기관전용과 외부위탁비율이 전혀 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연구개발적립금 사업은 자체연구사업비를 40%로 책정하여 이사회의 승인내역에 적합하게 편성하였음.
- 전체 집행률도 90.0%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예산편성은 연구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예산편성교육을 실시하고 선정단계에서는 연구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에 대하여 정성적인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PMS_MIS를 통해 편성내역을 공개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예산집행과정에서는 과제수행단계에서 예산을 검토하고, 예산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특히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단 점〉

- 전체적으로는 예산집행률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지만 수시연구과제 사업비의 경우 71.3%로 다소 미흡함.
- 뿐만 아니라 수시연구과제 중 일부과제의 경우는 30%대의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인 과제도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연구개발적립금 사업의 집행률은 90.0%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자체연구사업의 집행률이 76.1%로 저조한 수준임.

〈개선 및 건의사항〉

- 수시연구과제의 예산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바, 현재 시행되고

- 있는 예산집행률 점검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점검시스템의 권고방법을 집행률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적립금 사업 중 자체사업의 과제착수시기를 보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3-2. 보수체계의 적정성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함.
- 2014년 대비 2015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은 정부 인상률 기준(3.8%)을 준수함.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능률성과급 재원이 되는 결산잉여금(4,229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 퇴직급여충당금 편성·집행은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정성

〈장 점〉

- 기본연봉과 기타수당이 총 연봉의 70.1%, 성과연봉은 29.9%로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근속연수와 연동된 자동승급 등 기본연봉의 자동적인 인상효과를 갖는 수당은 없음.
-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수당은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였음.
-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은 전 직원이 $\pm 15\%$ 이며,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경우도 간부, 비간부 모두 2배 이상의 차등지급을 하고 있음.

〈단 점〉

- 기본연봉은 누적식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연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율도 실시하고 있지 않음.
- 성과연봉의 인원배분비율은 최고 8.6% 최저 4.7%로 10%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등급 28.1%, C등급 12.5%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되며, 기본연봉의 차등지급률과 인원배분비율 또한 평가기준 준수가 요청됨.
- 성과연봉과 결산인여급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인원배분 시 최고-최저등급 10% 이상, 특정등급 50% 미만 그리고 좌우가 대칭을 이룰 수 있도록 인원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임금피크제 도입의 적절성

〈장 점〉

- 임금피크제는 2015년 11월 30일에 노사 및 직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동년 12월 30일에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였음.
-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급, 본부별, 책임연구원급 이하 등 각 직급별로 설명 및 동의를 얻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음.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전국공공노조와 1차에서 5차까지 공동교섭을 추진하여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음.
-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원이며, 임금조정기간은 정년직전 2년 그리고 정년 2년 전에는 기준연봉 10%, 1년 전에는 20%의 감액지급률로 구성되어 있음.
- 신규채용자에 대한 채용조달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절감분, 퇴직자와 신규채용자의 임금차액 그리고 채용부족 시 인건비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기획재정부 임금 피크제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16개 연구센터를 만들어 특화연구에 집중함.
- 노사 간 대화를 통하여 방만 경영 개선 부분에 대하여 많은 실적이 있음.
- 법인카드 e-감사시스템 도입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긍정적임.
- 노사 관계 정상화를 통한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각 부분별 개선 노력의 성과가 있음.

<단 점>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기본연봉 누적식, 성과연봉 차등지급률, 성과연봉 인원배분비율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뚜렷한 개선실적이 없음.
- 국무조정실의 연구기관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 사항(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 -679 2016.03.22.)으로 지적된 평가등급부여 부적정, 승진심사시기 절차 등 세부기준 미비, 장기근속자 안식휴가부여 및 과도한 기념품 지급 관련 지적사항 중 일부는 이행하였으나 일부는 미이행하여 개선실적이 없음.
- 구성원의 소통강화, 구성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한 개선실적이 미흡함.
- 연구윤리 위반 관련사항에 대한 제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체계성이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감사 관련 직원 외에 기관 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방만경영 정상화 부문에서 예년과 달리 많은 개선 실적이 있으나 성과연봉제 운영 부분 등 외부지적사항의 개선실적이 부족함.
- 지적된 개인 위탁용역 계약 조항, 특허권 등 사전 예상 가능한 지적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요구됨.
- 외부감사(감사원) 지적사항 및 방만경영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자체 감사 방안이 필요함.
- 국무조정실의 연구기관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 사항(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 -679 2016.03.22.)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이 요구됨.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장 점〉

- 장애인 채용 시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내부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애 장애인 추천의뢰를 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신규채용 3명(위촉직 1, 청년인턴 2)의 실적이 있음.

〈단 점〉

- 상시근로자 총원 3,831명 대비 장애인 총 78명 고용으로 고용률 2.0%를 달성하여 정부기준 3.0%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기준 충족기간도 3개월에 불과함.
- 장애인 채용 시 가산점 제도를 명문화된 규정 속에 제도화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장애인 채용실적 확대가 미진함.
- 2015년도 실적은 청년인턴 등의 단기적인 장애인고용에 머물러 장기적인 대안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보다 실효성 있는 채용노력을 통해 정부기준 3.0%를 달성하고, 그 지속기간도 연중 10개월 이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우대조치의 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가산점 제도를 내부규정화 할 것이 요망됨.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장 점〉

- 기간 중 청년인턴 채용계획 17명 대비 31명(연구인턴 17명, 행정인턴 14명)을 채용함으로써, 계획 대비 182.4%의 채용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결원발생 시 비교적 신속한 충원을 실시함.
- 주5일 근무, 시간외 근무 최소화, 근무평정 등 근무관리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체계적인 멘토링시스템(지도멘토와 감성멘토 체계)에 의해 청년인턴들의 근무 적응도를 높였음.

- 청년인턴 직무교육, 취업교육, 원내외 세미나 참석 유도 등을 활발히 하였으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통해 인턴들의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였음
- 채용박람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특별휴가처리(17회)를 하고, 면접휴가 등도 실시하였으며, 타 기관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 등 취업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기간 중 인턴들을 내부 계약 위촉직으로 모두 7명을 전환채용하는 실적을 창출하였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재의 채용실적과 운영노력이 지속되도록 하되, 청년인턴의 결원 발생 시 1개월 이내의 신속한 충원노력이 보다 더 적극적일 것이 요망됨.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장 점〉

- 연구원의 내부규정(직원채용규칙 제19조)을 통해 국가유공자 채용 시 가점제도를 명문화 하고 있음.

〈단 점〉

- 기간 중 기관총원 296명 대비 국가유공자 16명 채용으로 우선고용비율 5.4%를 달성하였으나, 이는 정부기준 6.0%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였음.
- 국가유공자 관련 기관들에 대한 방문협의 및 협조 등, 국가유공자 채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들이 다소 소극적임.

〈개선 및 건의사항〉

- 보다 내실 있는 국가유공자 채용노력을 통해 정부기준을 충족하고, 중도퇴사 등으로 인해 고용률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고용유지 노력을 집중할 것이 요망됨.
- 보훈청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방문이나 공문발송, 전화협의 등의 횟수 확대 등)를 통해 필요한 국가유공자 인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지속적인 면담 및 안내 등을 통해, 채용으로 연결하는 내실 있는 채용노력이 요망됨.

□ 휴가장려 및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운영의 적정성

〈장 점〉

- 휴가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를 내부규정(복무규정 제20조의 2)에 명문화하였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도하였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연차휴가 소진율이 100%에 가까운 실적을 달성하였음.
- 출산전후 휴가 사용 제도(복무규정 제26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복무규정 제25조) 등이 내부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휴가들에 대한 내부적 관리 노력도 활발하여, 대상자들의 휴가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육아휴직제 관련제도(인사관리규정 제27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사관리규정 제27조의 2)가 잘 갖추어졌음.
- 제도의 활용을 위한 연구원 내부 관리노력도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대상자들의 제도활용 실적도 100%를 기록하였음.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태아검진시간 청구 : 복무규정 제26조 3항, 가족돌봄휴직 제도 : 인사관리 규정 제27조, 여성보건휴가 제도 : 복무규정 제26조 3항, 임신근로자 단축근무 제도 : 복무규정 제26조 3항) 등이 골고루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 되어 있으며, 그 관리노력과 활용실적도 우수한 편임.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장 점〉

- 기존의 차별해소 근거 규정 중에서 무기계약직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적정성을 보완함.
- 2015년 인력운영계획,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기준, 절차를 확정하고 시행함.
- 급여격차의 부분적 조정을 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전환평가를 역량, 성과 중심으로 변경 시행함.

- 무기계약직 전환목표 8명(전년이월 목표 포함)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함.
- 매년 전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준, 절차, 일정을 마련하여 시행함은 바람직함.

〈단 점〉

- 규정의 내용, 제도, 개선사항 등이 연구직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행정직 등 비연구직의 고용안정을 포함한 상대적 격차해소를 위한 규정, 제도가 마련되지 않음.
- 급여의 부분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상당한 수준의 급여격차가 존재하고(기본연봉, 성과연봉, 능률성과급),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 안정성 유지 외에는 비정규직과 동일한 연봉으로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함.
- 기본적 인력운영계획 및 전환계획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실시하는 관계로 전환의 계속성과 방향성이 다소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비정규직 인식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여 상대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정, 제도의 확충에 기관차원의 의지·노력이 필요함.
- 비정규 행정직의 고용기간의 연장가능 조항을 포함하여 비정규 행정직업무의 지속성과 고용안정성을 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함.
- 현실적인 차별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중기적,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함.